

Legislative & Policy Weekly

세종Law Focus

주간 입법·정책 동향

Vol.206 | 2023.10.24 (2023.10.16~10.22)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2. 입법(행정)예고 법안
3. 법률 발의(제출)안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국정감사 일정
2. 상임위원회 일정
3. 지난 주(10.16~10.20) 상임위별 주요 국정감사 상황보고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별첨1]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05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10.16~10.22)

2023년도 국정감사가 2주차 일정을 마치고 이번주에 마지막 주간이 시작됩니다. 각 상임위별 주요 감사내용들은 아래 「**지난 주(10/16~10/20) 상임위별 주요 국정감사 상황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주요 정책】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정책 중 눈여겨 볼 것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립대병원 역할 강화를 통한 전 달체계 혁신 등 필수의료 혁신전략**” 인데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을 필수의료 중추로 집중 육성, 지역 병·의원과의 상생·협력 네트워크 강화, 의사 수 확대 및 지역·필수의료 인력 유입 촉진, 지역·필수의료 혁신 집중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정책은 향후 단순히 의료지원시스템 강화를 넘어 지역소멸 예방, 국가균형발전 도모 등에 대해서도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내 기업형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 CVC) 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해 벤처투자 학술회의 개최하고, 벤처캐피탈(VC) 업계 주도로 기업형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 CVC) 협의회가 공식 출범한 바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 기업형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 CVC)에 대한 외부자금 출자 및 해외기업 투자 규제 완화를 추진할 예정이며, 한국인이 해외에 창업한 법인 등에 대한 기업형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 CVC)의 해외투자 규제 완화 방안도 검토**키로 하였습니다.

【입법(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는 추첨 공급이 원칙이나 산업단지 지정권자(시·도지사)와 입주협약을 체결한 경우 수의계약으로 공급이 가능한 상황으로 기초지자체에서 지정권자에게 기업과의 입주협약을 요청하더라도 지정권자는 입주협약 검토·추진의 행정력 부담으로 체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면서 투자 의향 기업들의 투자 철회가 우려되는 등 산업단지 입주에 대한 규제개선을 통해 기초지자체가 산업단지에 기업을 안정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법률 발의 및 제출안】

입법발의안 중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할 경우 그 강제의 대상이 되는 상품·용역의 종류 및 해당 상품·용역의 공급가격 산정 방식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거래조건의 무분별한 변경으로부터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 등 10인)**」, 기업형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 CVC)가 투자조합을 결정하는 경우 지주회사 체제 외부자금 유치 한도를 현행 40%에서 최대 50%까지로 늘리고 총 자산 중 해외투자 금액 비중을 현행 20%에서 30%까지 상향(안 제20조)하는

한편, SOC 등 투자회사 등의 임원을 겸임하는 기업결합은 신고의무를 면제하는 등 기업들의 벤처투자 활성화 도모하기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의원 등 10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영업비밀유출 등의 행위를 한 자를 신고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영업비밀 해외유출을 방지하여 국가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의원 등 16인)**」 등이 있습니다.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2023 국정감사 일정 외 과방위는 10/24(화) 전체회의에서 「**대덕특구 조성 50주년 기념 연구개발특구 지원 촉구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며, 문체위는 10/23(월) 연합뉴스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10/24(화) 10시, 진성준·강성희·한준호의원실 주최로 「**배달플랫폼 라이더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인데 추후 토론회 자료는 뉴스Law Focus 다음호를 통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바로가기](#)

- 미국 상무부, 대중(對中) 반도체 수출통제 개정조치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6
- 국립대병원 역할 강화를 통한 전달체계 혁신 등 “필수의료 혁신전략” 발표 (보건복지부) 7
-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 심의·의결 (국토교통부) 9
- 국내 기업형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CVC) 생태계 기반 조성 (중소벤처기업부) 9
- 규제개혁위원회, 기술발전·현장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 주기적 정비 (국무조정실) 11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바로가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 12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 ... 12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 13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 14
-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 15
-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국토교통부) 15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중소벤처기업부) 16
-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식품의약품안전처) 17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금융위원회) 17

2. 입법(행정)예고 법안

[바로가기](#)

-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 (환경부) 18
-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령안 (환경부) 18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9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9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바로가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 등 10인) 2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의원 등 10인) 21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의원 등 10인) 22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의원 등 11인) 23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1인)	23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1인)	23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	24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1인)	25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0인)	26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의원 등 10인)	26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바로가기](#)

1. 국정감사 일정	27
2. 상임위원회 일정	39
3. 지난 주(10.16~10.20) 상임위별 주요 국정감사 상황보고	30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별첨1]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05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10.16~10.22) [바로가기](#)

-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안 (IT)
- 2023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의 내용과 시사점 (ESG)
-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이후 미국의 공급망 재편 및 중국 견제를 위한 산업-통상정책 :
보조금 vs. 관세 (통상관세)
-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생활/공업용수의 단가를 산정함에 있어 기획재정부 훈령인 공공요금
산정기준보다 당사자 간의 계약이 우선함을 인정받은 의미 있는 판결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미국 상무부, 대중(對中) 반도체 수출통제 개정조치 발표

- 첨단 인공지능(AI) 칩 통제 강화 및 반도체 장비 통제 범위 확대

2023-10-17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작년 10월 발표된 수출통제 조치를 개정하여 관보에 게재함

이번 미국의 수출통제 강화조치가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됨. 첨단 인공지능(AI) 칩의 경우 국내 생산이 미미하고, 소비자용 칩은 통제 면제가 가능하여 영향은 크지 않으리라고 예상함

반도체 장비의 경우에도 이미 우리 기업들이 검증된 최종 사용자(V EU) 승인을 획득한바, 이번 조치로 인한 영향은 거의 없다고 평가됨

정부는 이번 미국 측 수출통제 강화조치를 더욱 자세히 분석하고,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미국 측과도 세계(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 및 수출통제 관련 협력을 긴밀히 진행해 나갈 계획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통제 허점 방지를 위한 통제대상 범위 확대 및 기준 세분화

- 국통제대상 AI 칩 범위 확대를 위한 통제기준 변경 (ECCN 3A090.a 개정)
- 상기 통제기준에는 미달하나 국가안보 위협 가능성이 있는 AI 칩 통제기준 신설 (ECCN 3A090.b 신설)

② 우회수출 방지를 위한 적용대상 및 지역 확대

- 전세계 어디든 수출 상대방 및 최종 모회사의 본사가 중국·마카오 및 무기 금수국에 소재한 것을 ‘인지(knowledge)’한 경우 수출 허가 필요
- 중국으로의 우회수출 방지를 위해 미국 수출통제관리규정 D그룹 국가(안보우려국) 대상*으로 허가제 확대 운용

* 구 공산권 국가(D:1), 미사일기술 확산우려국(D:4), 무기 금수국(D:5) 등으로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 등 48개 (이 중 대만 제외 중국·마카오 포함 47개국)이 허가대상)

③ 미국 우려 거래자 목록(Entity List)에 중국 첨단 칩 관련 13개사 추가

보건복지부

국립대병원 역할 강화를 통한 전달체계 혁신 등 “필수의료 혁신전략” 발표

2023-10-19

- 지역·필수의료 살리기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공백없는 필수의료 보장

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붕괴 위기, 넥스트 팬데믹 대비, 지방소멸 위기 극복 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 마련의 시급성에 따라 언제·어디서나 공백없는 필수의료 제공 보장을 위한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을 필수의료 중추로 집중 육성, 지역 병·의원과 상생·협력 네트워크 강화
→ 중증 최종치료 지역완결 및 필수의료 공백 해소

- ▶ (우수인력 확보) 필수분야 교수 정원 대폭 확대, 공공기관 총인건비 및 정원 등 제도 개선
- ▶ (R&D 투자) 한국형 ARPA-H 필수의료 장기투자, 진료·연구 병행 지원, 산학협력단 설치
- ▶ (공공정책수가) 중증·응급 보상 강화, 필수진료센터 보상 강화 지속 확대
- ▶ (인프라 첨단화) 노후 의료 시설·장비 개선 지원 확대, 기부금품 모집 허용 등 재원 확보

- 넥스트 팬데믹 대비를 위해 국립대병원 중심 인력·병상 즉각 대응체계 확립,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의 연계·협력 강화로 대응 기반 확충

② 의사 수 확대와 함께 지역·필수의료 인력 유입 촉진 (※ 필수의료 패키지)

③ 서울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를 국가중앙의료 네트워크로 연결,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역할 강화
→ 지역·필수의료 혁신 집중 지원

- 국립대병원 소관 변경(교육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긴밀 연계 및 진료·연구·교육 등 균형적·획기적 발전 추진

향후 추진 계획은

① 추진체계 구축 및 이행 로드맵 마련 ('23. 下)

- 「지역·필수의료 혁신추진 T/F(가칭)」 구성·운영, 혁신 비전 및 추진 로드맵 구체화
- 국립대병원 이관(법률*, 예산·조직 등) 추진
- * 서울대병원 / 서울대치과병원 / 국립대병원 / 국립대치과병원 등 4개 설치법
- 안정적 이관을 위한 복지부·교육부·국립대학·병원 협력체계 구축

② 핵심 과제별 후속 조치 이행 ('23. 下 ~ '24)

- 규제혁신, 법·제도 개선, 재정투자 확대, 인력 확충, 전달체계 혁신 지원 모델(수가 혁신, 지역 병·의원 역량 강화 등) 개발 등 추진
- ➡ 과제별 세부 이행계획 확정·발표 및 시행

필수의료 혁신전략 주요 내용

국립대병원 등 필수의료 중추로 집중 육성

- 지역에서 중증·응급 최종치료 완결 목표
- 필수의료 분야 교수 정원 대폭 확대
- 국립대병원 중환자실·응급실 병상·인력 확보 비용 지원과 필수의료센터 보상강화 확대

지역 병·의원과 상생·협력네트워크 강화

- 국립대병원 등이 총괄·조정하는 **지역내 필수의료 네트워크** 강화 및 국립대병원 미설치 권역 길병원(인천), 울산대병원(울산) 지정

넥스트 팬데믹 대응체계 강화

- 국립대병원 중심 인력·병상 즉각 대응체계 확립 등

인력확충 기반 강화

- 의사 수 확대 및 의대 정원 확대 추진, 피부·미용 인력 유출 방지 등 지역·필수의료 인력 유입 촉진

국가지원 체계 강화

- 지역·필수의료 총괄·조정 체계 확립, 지역·필수의료 재정투자도 지속 확대

국가중앙의료 네트워크 연결

- 서울대병원·국립중앙의료원·국립암센터를 **국가중앙 의료네트워크**로 연결, 국가 중앙병원으로서 역할 강화



자료: 보건복지부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변경

-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
- **국립대병원 혁신네트워크**, 국립대병원간 연계·협력

전국 국립대병원 현황

2022년 기준 14개 시·도 17곳(본원 10곳·분원* 7곳)
국립대병원 설치·운영, 인천·울산·충남 미설치



국토교통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 심의·의결

2023-10-13

- 공시가격의 신뢰성·투명성·정확성 제고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됨. 공시가격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데도 불구하고, 산정근거 미공개, 외부 검증 미흡 등 문제가 제기되어 대통령 공약 및 국정과제(공시가격의 투명성·정확성 제고)에 반영되었으며, 전문가와 수차례 논의하여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함

* 교수, 중부위 위원, 광역지자체, 부동산원, 감정평가사협회 등 13명(총 8회 개최)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신뢰성 제고) 광역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하여 국가가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 산정과정 전반을 지자체가 함께 상시 모니터링
 - 금년에는 서울시와 협업을 통해 센터 운영과 관련된 제도를 설계하고, 내년부터 타 지자체로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아갈 계획임
 - 공시가격 산정주체(부동산원·감정평가사)와 이의신청 검토주체(지자체)를 이원화하는 ‘선수-심판 분리’를 통해 사후구제의 공정성 제고
- ② (투명성 강화) 내년부터는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공동주택 층·향별 등급 및 조사·평가자 공개
 - 부동산 소유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시세 관련 정보 등 보다 구체적인 산정근거 제공
- ③ (정확성 제고) 과세대장 활용과 현장조사 체크리스트 도입 등을 통해 공시가격 기초자료를 보강하여 공시가격 산정의 정확성 제고
 - 올해부터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인력 확대('22년 대비 25% ↑)

중소벤처기업부

국내 기업형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 CVC) 생태계 기반 조성

2023-10-19

- 「2023 기업형 벤처투자사 벤처투자 학술회의」 개최
- 벤처캐피탈(VC) 업계 주도로 기업형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 CVC) 협의회 공식 출범

한국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협회 산하 기업형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 Corporate Venture Capital, 이하 CVC) 협의회가 공식 출범한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내 CVC 전체에 대한 현황 분석과 향후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이를 업계와 논의함

기업형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 CVC)는 ‘기업이 자신의 경영전략과 연계하여 투자하기 위해 설립·보유하는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을 의미함. 전략적 투자자라는 점에서 재무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일반적인 벤처투자

사(VC)와 구분됨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 비금융 기업집단의 계열회사, ▷ 모기업, 동일 집단(그룹) 계열회사 등 기업집단의 출자가 30% 이상이면서 최대출자자인 기금(펀드) 운용,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투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이하 신기사)를 CVC로 분류하며, 이 범주에 따를 때, '23년 상반기 말 기준 86개사 내외(창투사 51개사, 신기사 30 40 개사)가 CVC에 해당됨

국내 CVC는 '22년 약 2.7조원을 투자한 것으로 집계됨. 창투사 CVC가 1.1조원을 투자했고, 신기사 CVC 투자는 1.6조원 내외인 것으로 추정됨. 이는 '22년 전체 벤처투자액 12.5조원의 22% 수준임

구 분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 수 (’23.상반기, 개사)			벤처투자금액 (’22년, 조원)		
	계	창투사	신기사	계	창투사	신기사
전체	343	238	105	12.5	6.8	5.7
기업형 벤처투자사 (벤처캐피탈, CVC) (괄호 안은 %)	86 (25)	51 (21)	35 (33)	2.7 (22)	1.1 (16)	1.6 (28)

*신기사 기업형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 CVC)의 수와 벤처투자금액은 추정치임

기업형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 CVC) 정책 방향 주요 내용으로는

① 「공정거래법」 등 기업형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 CVC) 제도 및 규제 개선

-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공정거래법」 제20조가 적용되는 일반지주회사 CVC에 대한 외부자금 출자 및 해외기업 투자 규제 완화* 추진

* 외부자금 출자:(현행) 기금(펀드) 결성액의 40% 이내 → (개선) 50%까지 허용 해외기업 투자:(현행) 운용 자산의 20% 이내 → (개선) 30%까지 완화

- 한국인이 해외에 창업한 법인 등에 대한 CVC의 해외투자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② 모태기금(펀드)을 통해 기업형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 CVC) 기금(펀드) 조성 지원

- 신생 벤처투자사(VC) 전용 경쟁분야인 모태기금(펀드) 루키대전(리그)에 매년 모태기금(펀드) 출자예산의 10% 이상을 출자하여 CVC를 포함한 신생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의 시장 안착을 지원하는 동시에, CVC의 인수합병(M&A) 등 전략적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전용 투자프로그램 신설 검토

③ 기업형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 CVC)의 세계(글로벌) 교류협력 촉진

- 국제 CVC 연결망(네트워크) 행사인 ‘글로벌 코퍼레이트 벤처링 인 아시아(Global Corporate Venturing in Asia)’를 컴업과 연계하여 11월 9일~10일 개최하는 등 국내 CVC와 세계(글로벌) CVC 간 연결망(네트워크) 구축

④ 기업형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 CVC) 업계가 활성화 정책을 주도할 수 있는 기반 구축

- CVC 벤처투자 학술회의(컨퍼런스) 등 CVC 협의회의 활동을 확대·정례화하는 한편, 관련 통계를 고도화하고 이를 CVC 협의회와 공유할 계획임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기술발전·현장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
주기적 정비

2023-10-16

규제개혁위원회는 「'23년 재검토규제 심사* 결과」를 심의·의결함

*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상 행정규제에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것으로, 기한 도래시 경제·사회·환경변화에 따른 규제의 타당성,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정비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제도

위원회는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의 남설 방지를 위해 중앙행정기관 장이 규제 신설·강화시 위원회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렇게 만들어진 규제도 일정 기간(최대 5년)마다 규제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정비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올해는 375건에 대해 일반 국민과 경제단체(경총, 중기중앙회 등) 의견수렴, 민간전문가 TF 검토 등 심층 심사를 통해 109건의 규제를 정비기로 의결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대출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대출모집인)가 하나의 금융회사에 전속되어 해당 회사의 상품만을 취급하도록 한 「금융소비자보호감독규정」 제22조('21.3 제정)상 대출모집인 1사 전속의무 폐지 권고**
 - 동 규정이 제정된 '21년과 비교하여 큰 폭으로 상승한 대출금리로 서민의 금융부담이 높아진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대출모집인을 통해 여러 금융회사의 상품을 한 번에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다면 소비자 편의가 증진될 뿐 아니라, 금융회사간 경쟁이 촉진되어 소비자가 더 좋은 조건의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등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점을 감안한 것임
- ② **형태가 엇비슷한 택배차량 등은 물류센터 주차시 식별이 어렵다는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용 차량의 앞면 광고표시 허용**
- ③ **대학교가 자율적으로 대학 내 옥외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직장 내 체육시설 종류도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 권고**
- ④ **기술발전에 따른 온라인교육, 찾아가는 현장교육이 활성화되는 등 교육환경이 바뀌었음에도 교육장을 확보해야만 경비업을 할 수 있도록 한 낡은 규제도 개선할 것을 권고**

< 규제개혁위원회 주요 권고사항 >

권고 내용	소관
① 둘 이상의 금융회사 대출상품 취급을 금지한 '대출모집인 1사 전속 의무' 폐지	금융위
② 체육활동 지도 수요가 없는 '골프장 내 체육지도자 배치 의무' 폐지	문체부
③ 경비업 허가·변경 허가시 '교육장 확보 요건' 폐지	경찰청
④ 택배 차량 등 사업용 차량의 차체 앞면 광고 허용	행안부
⑤ 대학교 내 옥외 광고물 표시 허용	행안부
⑥ 소프트웨어진흥단지 지정을 先조성·後지정 → 先지정·後조성으로 개선	과기부
⑦ 직장(500명 이상) 내 체육시설 종류 규제 완화(2종류 이상 → 1종류 이상)	문체부
⑧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휴양콘도미니엄업, 청소년수련지구 내 목욕장업 허용	교육부 / 여가부
⑨ 건설 현장의 혼선을 초래하는 지침과 서식 간 상이한 기준·내용 통일	국토부
⑩ 휴대폰 지원금 위반행위에 대한 긴급중지명령의 범위 축소	방통위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내용	시행일자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3-10-19 시행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 영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이 집합투자업자인 경우에는 그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제공하는 모든 자산 관리·운용 영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인 경우에는 그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 영역 중 다른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와 관련한 자산 관리·운용 영역에 한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제27조의2 신설)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3-10-19 시행
---------	--------------------------------------	---------------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견기업 관련 정책을 조사·연구하기 위한 전문기관이 아닌 자가 중견기업 전문기관과 동일·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중견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을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358호, 2023. 4. 18. 공포, 10. 19. 시행)됨

이에 따라, 중견기업 전문기관이 아닌 자가 중견기업 전문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고, 중견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을 직전 사업연도 전에 창업하거나 합병·분할 등을 한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일의 다음 날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제13조의2, 제16조, 별표 3 제2호)

화재·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재사용전기용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안전성검사 제도를 도입하고,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제품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안전성검사기관이 고의 또는 과실로 안전성검사를 부실하게 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005호, 2022. 10. 18. 공포, 2023. 10. 19. 시행)됨

이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안전성검사기관의 업무정지 처분을 같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손해배상 등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대상·기간 및 안전성검사 관련 수수료의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제14조의2 신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이거나 제품의 안전관리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안전성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검사설비 및 인력 등의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을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② 안전성검사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같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제14조의3 신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안전성검사기관에 업무정지 처분을 같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을 업무정지일수에 20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정하되,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이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도록 함

③ 손해배상 등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제14조의4 신설)

- 안전성검사기관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안전성검사기관은 안전성검사 업무의 착수일부터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종료일까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안전성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④ 수수료의 부과기준 (별표 2)

-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지정 신청 수수료와 심사수료를 정하고, 안전인증 관련 수수료 체계를 단순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으로 구분하여 받던 제품시험 수료를 앞으로는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으로 구분하지 않고 단일체계로 정함

화재·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재사용전기용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안전성 검사제도를 도입하고,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제품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안전성검사기관이 고의 또는 과실로 안전성검사를 부실하게 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법률 제19005호, 2022. 10. 18. 공포, 2023. 10. 19.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820호, 2023. 10. 18. 공포, 10. 19. 시행)이 개정됨

이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절차, 안전성검사 신청 절차,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새로운 안전기준의 적용,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취소 등의 처분 기준 및 안전성검사기관이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등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절차 (제55조의2 신설)

-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업무규정 등을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알린 후 그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하여 지정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 범위를 정하여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하며, 관련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② 안전성검사의 신청 등 (제55조의4 신설)

-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 안전성검사를 받으려는 제조업자는 해당 제품을 출고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제품설명서 등이 첨부된 안전성검사 신청서와 제품검사에 필요한 시료를 함께 안전성검사기관에 제출하도록 함

③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새로운 안전기준의 적용 (제55조의6 신설)

- 안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 또는 안전성검사기관은 안전성검사에 대한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않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해당 제품에 적용할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④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 기준 등 (제55조의9 신설)

-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성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안전성검사기관의 업무의 일부를 정지하거나 지정을 취소하고,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를 한 경우 중대한 위반과 경미한 위반으로 구분하여 업무의 일부를 정지하거나 지정을 취소하도록 함

⑤ 안전성검사기관의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제55조의10 신설)

- 안전성검사기관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인당 1억5천만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을 보장하도록 하고, 부상당한 경우 1인당 3천만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을 보장하도록 하는 등 안전성검사기관이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을 정함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3-10-19 시행

도시개발구역 내 건축물 등의 존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존치하게 된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공공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개발법」이 개정(법률 제 19561호, 2023. 7. 18. 공포, 10. 19. 시행)됨

이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내 건축물 등이 종전에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고 토지이용계획상 수용 가능하며 해당 건축물 등을 존치하는 것이 공익상 또는 경제적으로 현저히 유익하고 장기간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존치할 수 있도록 하고, 존치하게 된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존치부담금은 존치 대상 건축물의 기존 부지에서 시행자가 취득해야 하는 취득부지를 제외한 존치부지를 대상으로 해당 건축물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학교 등 공공시설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지역 내 건축물 등의 경우에는 부담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게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제84조의2, 제87조)

국토교통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2023-10-19 시행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 등에게 모빌리티 관련 데이터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모빌리티 전문인력의 양성과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협력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

이에 따라, 모빌리티 관련 데이터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가 데이터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전문인력 협력기관의 지정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모빌리티지원센터의 지정절차 (제2조)

- 모빌리티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서에 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 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빌리티지원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국토교통 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② 모빌리티 관련 데이터의 제출 거부 사유 (제8조)

- 모빌리티 관련 데이터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거나 다른 법령이나 계약에 따라 비밀 유지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등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모빌리티 관련 데이터의 제출 요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③ 전문인력 협력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제9조)

-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시설 및 장비를 보유하고, 전문 교수인력을 확보했으며 모빌리티 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계획의 내용이 적절한 자 중에서 모빌리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협력기관을 지정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인력 협력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공보 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3-10-19 시행

민간영역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등록요건, 업무집행조합원의 요건 및 투자 의무 등과 관련하여 기존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특례를 도입하는 등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조성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395호, 2023. 4. 18. 공포, 10. 19. 시행)됨

이에 따라,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등록요건, 투자비율 및 행위제한의 특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등록요건 (제41조의2 신설)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결성하는 조합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으로 등록하려면 출자금 총액 규모는 1,000억원 이상으로 하되, 분할 출자하는 경우 최초 출자금이 200억원 이상이 되도록 함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으로 등록하려는 조합은 출자 1좌의 금액은 100만원 이상, 유한책임조합원의 수는 49인 이하,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은 출자금 총액의 1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고, 해당 조합의 존속기간은 5년 이상이 되도록 함

②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투자비율 및 행위제한의 특례 (제41조의3 신설)

- 기존 벤처투자조합은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출자금액의 40퍼센트 이상을 창업기업이나 벤처기업에 의무적으로 출자해야 하는 반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은 출자금액의 60퍼센트 이상을 다른 벤처투자조합에 의무적으로 출자하도록 함
- 기존 벤처투자조합은 증권시장에 상장된 회사에 투자하는 경우 벤처투자조합 출자금액의 20퍼센트까지 투자할 수 있는 반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은 40퍼센트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함
- 기존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금융회사 등의 주식 등을 취득하거나 소유할 수 없는 반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나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의 주식 등을 취득하거나 소유할 수 있도록 함
- 기존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그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벤처투자조합 등이 발행하거나 소유한 주식 등을 매입할 수 없는 반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업무집행조합원인 벤처투자조합에서 발행하거나 소유한 주식 등을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출자금액의 30퍼센트 이내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함

식품의약품안전처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3-10-19 시행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약품 등의 불법판매·알선·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모니터링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의약품 등의 불법판매·알선·광고임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불법판매 등 모니터링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19359호, 2023. 4. 18. 공포, 10. 19. 시행)됨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으로 하여금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의약품 등의 명칭, 위반행위 등을 해당 의약품 등을 판매, 알선 또는 광고를 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하는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공공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제32조의6, 제32조의7, 제32조의13, 제34조의9, 제34조의15 신설 등)

금융위원회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3-10-17 시행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등에게 예금보험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때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등에 따른 예금등 채권’ 및 ‘그 밖의 예금등 채권’으로 구분하여 각각 5천만원의 지급한도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연금저축상품의 사회보장적 성격과 보험상품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고려키로 함

앞으로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등에 따른 예금등 채권’, ‘신탁 및 보험 계약에 따른 연금저축계좌(개인연금저축 및 연금저축 포함)의 예금등 채권’, ‘보험계약에 따른 예금등 채권 중 보험금(보험기간이 종료되어 지급되는 보험금 제외)’ 및 ‘그 밖의 예금등 채권’으로 구분하여 각각 5천만원의 지급한도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제3조제4항제1호, 제18조제3항)

2.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의견접수기간
환경부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	2023.10.19. ~11.28

안전기준을 위반한 어린이용품을 판매한 사업자의 자발적 회수 근거 신설 등 내용의 「환경보건법」이 개정('24.2.17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자발적 회수 등의 절차 규정 (안 제19조의3)

- 자발적 회수 등 계획서, 결과보고서(재발 방지 대책 포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자발적 회수 등의 절차 신설

② 자발적 회수 관련 업무 위임·위탁 (안 제22조)

- 자발적 회수 등의 업무 관련 사항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

※ 문의처 :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전화: 044-201-6754, 팩스: 044-201-6765)

환경부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령안	2023.10.19 ~11.28
-----	--------------------	----------------------

안전기준을 위반한 어린이용품을 판매한 사업자의 자발적 회수 근거 신설 등 내용의 「환경보건법」이 개정('24.2.17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정밀검사 요건, 확인검사 수검 간주 요건 명시 (안 제11조의2제4항 및 5항)

- 현행 조사 운영체계를 반영하여 정밀검사 요건을 추가하고, 법령에서 위임한 확인검사 수검 간주 요건 명시

② 자발적 회수 등의 세부 절차 규정 (안 제11조의10)

- 하위법령에서 위임한 자발적 회수 등의 세부 절차 규정

※ 문의처 :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전화: 044-201-6754, 팩스: 044-201-6765)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3.10.17
~11.27

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와 동 위원회에 속한 전문위원회는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를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 단체로 규정하고 있어 소수의 노동조합과 사용자 단체가 실질적으로 위원 임명권을 가진 결과를 초래함

그 결과, 위원 인력풀이 제한적이고, 같은 위원이 계속 연임하는 등 보다 다양하고 능력 있는 전문가의 진입을 통한 정책 의견 수렴이 원활하지 않아 공모 등을 통해 다양한 단체로부터의 추천을 확대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의 실질적인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비판이 대두됨

따라서 **소수 단체의 참여권 독점과 과도한 영향력 행사를 줄이고, 산업재해 보상 및 예방정책에 보다 다양하고 실질적인 노사의 요구가 반영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전문가들의 참여 통로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단체 확대 (안 제4조제1호 및 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를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 단체”에서 “근로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로 각각 확대

② **산업재해보상보험정책전문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전문위원회 및 산업안전보건전문위원회** 위원 추천 단체 확대 (안 제8조제4항제2호, 제5항제2호 및 제6항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정책전문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전문위원회 및 산업안전보건전문위원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를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 단체”에서 “근로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로 각각 확대

※ 문의처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전화: 044-202-8836, 팩스: 044-202-8091\)](tel:044-202-8836)

국토교통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3.10.17.
~11.27.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는 주점 공급이 원칙이나 산업단지 지정권자(시·도지사)와 입주협약을 체결한 경우 수익계약으로 공급이 가능한 상황으로 기초지자체에서 지정권자에게 기업과의 입주협약을 요청하더라도 지정권자는 입주협약 검토·추진의 행정력 부담으로 체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면서 투자 의향 기업들의 투자 철회가 우려되는 등 **산업단지 입주에 대한 규제개선을 통해 기초지자체가 산업단지에 기업을 안정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또한, 기업의 신속한 투자를 통한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준공 후 일정기간이 도래한 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권한의 일부를 지방정부에 위임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기초지자체와 기업간 입주협약을 통한 수의계약 허용 (안 제42조의4제4항)

- 현재 산업입지법은 지정권자(시·도지사)와 기업 간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해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으나,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기초지자체가 관리권자로서 준공 후 산업단지를 관리·운영하고 있으므로 기초지자체 지역특성에 맞는 기업의 신속한 유치를 위해 일반산업단지의 수의계약 범위를 사업시행자인 기초자치단체가 산업단지 지정권자와 협의를 거쳐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허용하고자 함

② 국가산업단지 권한의 지방정부 위임 확대 (안 제49조 별표3)

-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승인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으로 규정되어있으나, 10년이 경과한 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는 현지 실정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에 개발 계획 변경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임하고자 함

※ 문의처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http://www.mol.go.kr) (전화: 044-201-3683, 팩스: 044-201-5564)

3. 법률 발의(제출)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무위원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0인)

2023-10-16 발의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용역 등을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해당 상품·용역 등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라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이를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아니하면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정보공개서를 통해 미리 알리는 조건 하 해당 상품·용역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관련하여 최근에는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단가인상으로 인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필수품목 관련 사항은 가맹계약 상 중요한 권리·의무 사항임에도 가맹사업법의 가맹계약서 기재 의무사항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가맹본부가 계약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필수품목을 지정 또는 확대하거나 단가를 인상하는 상황임. 즉, 가맹계약 상 중요한 권리·의무 사항인 필수품목의 지정·변경 및 거래조건 등이 계약서 의무 기재사항에 포함되지 않아,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을 통한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여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할 경우 그 강제의 대상이 되는 상품·용역의 종류 및 해당 상품·용역의 공급가격 산정방식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거래조건의 무분별한 변경으로부터 가맹점사업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안 제11조제2항제12호 신설)

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 등 10인)

2023-10-16 발의

글로벌 경기침체, 고금리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세를 보이고 있음.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7월 우리나라 기업들의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8.9% 감소하였고, 이러한 감소폭은 11년 4개월 만에 최대임

투자위축은 단기적인 경기침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혁신 활동을 위축시켜 장기적 성장동력 잠식까지 초래할 수 있음. 우리나라 경제가 마주하고 있는 장기적 저성장 구도를 탈피를 위해서는 기업들의 투자 진작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임

이를 위해서는 경제전반의 불확실성 제거, 금리인하 등의 거시경제적 여건 개선과 더불어 기업들이 현장에서 직면하는 각종 제도적 어려움을 해소해 줄 필요가 있음. 지난 2021년 12월 일반지주회사도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 (corporate venture capital, 이하 'CVC')을 설립·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이 개정·시행되면서 지주사의 잉여금을 활용한 국내 벤처·스타트업 투자 활성화의 길이 열렸음.

그러나 시장의 훈풍(薰風)을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일부 행위규제가 펀드조성과 투자단계에서 투자 의욕을 꺾는 사례가 다수 발생되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음

또한 금융투자의 주체인 투자회사, 설비투자의 주체인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시행자 등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기업결합 신고가 면제되고 있음에도, 해당 회사들에 대한 영향력이 주식 취득보다도 약하고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낮은 임원겸임은 신고 면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투자회사 및 민간투자사업시행자 등을 통해 투자활동을 하려는 사업자들이 불필요한 신고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현실 또한 개선이 필요한 신발 속 모래알임

이에 CVC가 투자조합을 결정하는 경우 지주회사 체제 외부자금 유치 한도를 현행 40%에서 최대 50%까지로 늘리고 총 자산 중 해외투자 금액 비중을 현행 20%에서 30%까지 상향(안 제20조)하는 한편, SOC 등 투자회사 등의 임원을 겸임하는 기업결합은 신고의무를 면제(안 제11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들의 활발한 벤처펀드 결성을 촉진하고 위축된 벤처투자를 활성화함은 물론, 나아가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통한 국가 경제 성장동력의 확충에 기여하고자 함

기획재정위원회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0인)

2023-10-17 발의

「개별소비세법」은 물품의 구매나, 장소에 대한 입장 등 특정한 영업행위에 부가한다는 취지에 맞춰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원유의 경우에는 휘발유·등유·경유·중유 등으로 단순 구분하여 세목을 지정하고 있음

최근 산업계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유가 아닌 중유를 정제원료로 구입하는 사례가 늘어남. 최종소비재가 아닌 정제원료로 사용되는 중유의 등장은 현행법상 특정 제품의 소비행위에 부과해야 하는 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함

또한 정제원료라는 동일 목적으로 사용되었지만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는 원유에 비교해 중유의 경우에는 사용목적과 관계없이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게 됨

특히 생산 공정 원료용으로 사용되는 중유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는 전 세계적으로 국내에만 존재하는 조세제도임. 개별소비세 비과세 석유 제품인 항공유, 나프타, 아스팔트에 중유가 원료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로의 추가 과세는 수입제품 대비 가격경쟁력이 하락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실정임

이에 원료용 중유를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여 소비행위에 과세하는 법의 취지를 살리고, 국내 제조업의 원가상승을 방지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안 제18조제1항제14호 신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1인)

2023-10-18 발의

현행법은 농·어업 및 임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영농조합법인과 그 조합원 및 영어조합법인과 그 조합원 등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면제하고,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는 등의 조세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3년 12월 31일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런데 세계 경기 침체에 따라 국내 경기 상황이 밝지 않아 조세 특례가 일몰되면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의 납세 부담이 증가하여 기업적 농·어업 경영 활성화를 통한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

이에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조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여 농·어업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66조, 제67조 및 제68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1인)

2023-10-19 발의

현행법은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19%의 단일세율로 소득세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는데, 해당 과세제도의 적용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로 한정되고 있음

그런데 글로벌 경쟁 시대에 일정 소득 이상의 고급 외국인력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 소득에 대한 단일세율을 유지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 (안 제18조의2제2항)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1인)

2023-10-19 발의

현행법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공장 또는 법인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5년 내지 7년 동안 법인세 및 소득세를 감면하고 있는데, 이전하는 지역이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위기지역” 이거나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인 경우에는 감면기간을 2년 내지 3년을 추가로 연장하여 감면하고 있으며, “위기지역” 내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법인세 등을 5년 동안 감면하고 있음

한편,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은 대규모 재난 발생 및 경영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 · 소상공인 밀집지역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하여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현행법의 감면 제도가 재해 등 피해가 발생한 위기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한 제도인 점을 고려하여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도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및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과 같이 조세 지원을 하려는 것임** (안 제63조, 제63조의2 및 제99조의9)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

2023-10-20 발의

현행 내국법인이 소재 · 부품 · 장비 또는 국가전략기술 관련 외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 취득가액의 100분의 5(중견기업 100분의 7, 중소기업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으며, 이 때 외국법인의 주식 100분의 50(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 100분의 30) 이상을 취득해야 함

그러나 세계 각국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국가안보 · 경제와 직결된 핵심기술을 집중 육성 중인 동시에 기술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등 외국법인의 인수 · 합병을 통한 전략기술 이전이 어려운 실정임

최근 국내 자동차 기업이 해외 반도체 핵심 기술을 확보하거나 백신 분야 등에서 동종 업체 상호간 기술적 시너지 효과를 위해 지분 투자를 통한 기술 ·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특히, 국가전략기술을 보유하는 외국법인에 대한 소수의 지분투자를 통해 기술 협력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함으로써 기술 취득의 기회를 갖는 것 역시 국익에 보탬이 될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에서의 지속적으로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함

또한 적용대상을 이미 사업화된 시설에 투자세액공제를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에 국한하기 보다는, 장래 우리나라가 경제안보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핵심기술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임

이에 **외국법인과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지분 보유 요건을 대폭 낮추고,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12대 국가전략기술을 포함하여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등 국가전략기술의 신속한 확보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미래 핵심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안 제13조의3제3항)

농어민과 임업인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로서 매입세액이 불공제됨에 따라, 산지에서 출하되는 농수산물·임산물의 운송용역 등 물류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담(불완전 면세)하고 있음

이에 따라 영세한 농어민과 임업인은 물류비용의 절감을 위해 관행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영세 운송업체와 무자료 거래를 해 오고 있어 그 부작용은 적지 않은 실정임

현실적으로 농수산물·임산물의 운송용역에 대한 10%의 부가가치세 부담으로 영세한 농어업인과 임업인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함으로써 이들의 적극적인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음. 아울러 운송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영세 무자료 운송업자와의 거래가 성행함으로써 운송물 파손, 분실, 도난과 운송시간 지연 등에 따른 손실을 산지 생산자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그뿐만 아니라 무자료 거래가 성행함에 따라 관련 정책 수립과 운용에 필요한 운송 규모와 실태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음으로써 농정 계획·집행에서의 비효율도 커지고 있음. 그리고 이는 선진 물류 업체의 산지 시장진입을 가로막아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 유통고도화’와 ‘스마트 농산물 유통혁신 기반 조성’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농업용·임업용 기자재 등의 공급에 대한 경우 외에, 농수산물·임산물 운송용역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렇게 하여, 세제혜택을 통한 운송비의 감소로 농가소득이 직접적으로 높아지도록 하고 지방의 인구 유출을 막으며 청년농 육성을 통한 지역 고용증대에도 기여함으로써 최근 심각해져 가는 지방소멸과 인구감소의 국가적 위기 대응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그리고 물류 표준화와 정보화 달성의 기반을 마련하여 미래성장산업으로서의 발전을 도모하고, 첨단설비와 운송 노하우를 갖춘 전문운송업체의 운송시장 진출, 농산물 신선도 유지, 포장 개선과 오염원 차단 등도 가능하게 하여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임

또한, 무자료 거래의 퇴출로 농가 등의 거래 규모와 운송 품목 등이 투명하고 정확하게 집계되어, 품목별·규모별로 정책을 효율적으로 계획·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무자료 거래의 세원(稅源) 노출에 따라 정부의 세수 기반을 확보하고 산지 운송업체 간 과세형평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안 제105조제1항제7호 신설)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0인)

2023-10-17 발의

현행법은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제조등금지물질”로 지정하여 모든 용도로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다만, 예외적으로 시험·연구 또는 검사 목적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등금지물질을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라 제조등금지물질 승인을 받아 제조등금지물질을 제조·수입 또는 사용하고 있음

그런데 “제조등금지물질”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금지물질도 포함되어 있음. 이에 제조등금지물질이면서 금지물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금지물질 제조·수입 허가를 받아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조등금지물질 제조·수입·사용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하여 규제가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수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수입할 수 있도록 동일한 화학물질에 대한 중복규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안 제117조제2항)

국토교통위원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의원 등 10인)

2023-10-19 발의

현행법에서는 주택조합의 해산 규정을 두어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조합원 모집 신고의 수리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해산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주택조합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외에 사업추진이 종료된 경우에 대한 해산 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사업이 종료된 조합의 해산을 고의로 지연시키며 조합의 임원이 장기간 임금을 받거나 조합원에게 배분될 자산을 유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사업이 종료된 주택조합의 경우 주택건설사업 종료 후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에 해산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이 해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산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주택조합원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안 제14조의2제3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등)

III. 국회 주요 의사일정(안)

1. 국정감사 일정 (국정감사 종합일정표) [\[파일 다운로드\]](#)

일자	위원회	대상 기관	장소/시간
※ 국정감사 전체 일정은 위 첨부된 '국정감사 종합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23(월) 10개 위원회	법사위	대검찰청	대검찰청 / 10:00
	기재위	한국은행	한국은행 본점 / 10:00
	외통위	<구주반> 주우즈베키스탄대사관 등 3개 기관	주우즈베키스탄대사관 / 10:00
		<아중동반> [업무보고] 주홍콩총영사관	주홍콩총영사관 / 14:00
	국방위	육군본부 등 11개 기관	육군본부 / 10:00
		공군본부 등 5개 기관	공군본부 / 15:00
	행안위	<지방1반> 충청남도	충청남도청 / 10:00
		충청남도경찰청	충청남도경찰청 / 도청감사종료후
		<지방2반>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청 / 10:00
		대구경찰청	대구경찰청 / 시청감사종료후
	문체위	국립중앙박물관 등 21개 기관	국회 / 10:00
	농해수위	<종합감사>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	국회 / 10:00
	복지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8개 기관	국회 / 10:00
	환노위	근로복지공단 등 12개 기관	국회 / 10:00
	국토위	<지방1반> 경기도	경기도청 / 10:00
		<지방2반>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청 / 10:00
10/24(화) 10개 위원회	법사위	서울고등법원 등 17개 기관	서울고등법원 / 10:00
	정무위	예금보험공사 등 7개 기관	국회 / 10:00
	기재위	한국수출입은행 등 5개 기관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 10:00

일자	위원회	대상 기관	장소/시간
	교육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등 8개 기관	국회 / 10:00
	과방위	한국연구재단 등 53개 기관	대전(ETRI) / 10:00
	국방위	해군본부 등 7개 기관	해군본부 / 10:00
	행안위	<지방1반> 전라북도	전라북도청 / 10:00
		전라북도경찰청	전라북도경찰청 / 도청감사종료후
		<지방2반> 강원특별자치도	강원도청 / 10:00
		강원경찰청	강원경찰청 / 도청감사종료후
	문체위	대한체육회 등 6개 기관	국회 / 10:00
10/25(수) 3개 위원회	산자중기위	한국석유공사 등 12개 기관	국회 / 10:00
	환노위	한국수자원공사 등 12개 기관	국회 / 10:00
	농해수위	<종합감사> 해양수산부 및 소관기관	국회 / 10:00
10/26(목) 10개 위원회	복지위	<종합감사> 보건복지부 등 3개 기관 *기타 감사 대상기관 전체	국회 / 10:00
	국토위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4개 기관	인천국제공항공사 / 10:00
	법사위	<종합감사> 법무부 등 6개 기관	국회 / 10:00
	정무위	<종합감사> 국가보훈부 등 6개 기관	국회 / 10:00
	기재위	<종합감사> 기획재정부 등 5개 기관	국회 / 10:00
	교육위	<종합감사>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 감사대상기관	국회 / 10:00
	과방위 과방위	<종합감사>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감사대상기관 전체	국회 / 10:00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감사대상기관 전체	국회 / 원안위 감사종료후
	국방위	[현장시찰] 드론작전사령부 등	포천 / 10:00
	행안위	<종합감사> 행정안전부 등 6개 기관	국회 / 10:00
	문체위	<종합감사> 문화체육관광부 등 2개 기관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 포함)	국회 / 10:00

일자	위원회	대상 기관	장소/시간
10/27(금) 8개 위원회	산자중기위	<종합감사> 산업통상자원부	국회 / 10:00
	환노위	<종합감사> 고용노동부 등 2개 기관	국회 / 10:00
	정무위	<종합감사> 금융위원회 등 2개 기관	국회 / 10:00
	기재위	<종합감사> 기획재정부 등 7개 기관	국회 / 10:00
	과방위	<종합감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관 감사대상기관 전체	국회 / 10:00
	외통위	<종합감사> 외교부 등 10개 기관	국회 / 10:00
	국방위	<종합감사> 국방부 등 6개 기관	국회 / 10:00
	산자중기위	<종합감사> 중소벤처기업부 등 2개 기관	국회 / 10:00
	환노위	<종합감사> 환경부 등 2개 기관	국회 / 10:00
	국토위	<종합감사> 국토교통부 등 3개 기관	국회 / 10:00

2. 상임위원회 일정

구분		일시	내용
과방위	전체회의	10/24(화) 10:00	- 대덕특구 조성 50주년 기념 연구개발특구 지원 촉구 결의안
문체위	전체회의	10/23(월) 19:00	- 업무보고(연합뉴스)

3. 지난 주(10.16~10.20) 상임위별 주요 국정감사 상황보고

정무위원회	공정위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등 3개 기관	2023-10-16
○ 윤창현(국), 인천공항공사 표준계약서 내 3개월 임대료 연체 시 입점 업체 임대보증금 전액 몰수 조항 있음. 공기업에 준하는 기관이 이 같은 문제를 아직까지도 시정하지 않은 것은 문제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신고가 있어 조사하겠음. (약관 관련해서) 불공정성을 이유로 효력을 상실할 만한 조항이 있는지도 면밀히 검토하겠음 ○ 윤주경(국), GS리테일은 올해 초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협조한 이유 등으로 과징금을 20% 감경받았으나 이후 공정위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음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과징금 제도를 엄격하게 운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 위법성까지 인정하는 경우에만 과징금을 감경하고, 소송에서 이를 부인하면 이를 취소하는 방안을 내부에서 검토 중 ○ 유의동(국), 지난 정부에서 정부안으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을 내며 전속고발권을 없애자고 했는데 참 부끄러운 역사임. 공정위가 그 기능을 제일 잘 수행할 수 있으니 고발권을 준 건데 그것을 스스로 내려놓겠다고 했음. 다시는 이런(전속고발권 폐지) 요구가 없도록 해야 할 것 ○ 더불어민주당 ▷ 플랫폼 기업 대금 정산 지연으로 입점 기업들 대출받아 영업하는 등 갑질 피해 심각 ▷ 플랫폼 사업자에 편향된 공정위 규제 초안 강행 의혹 제기 ▷ 공정위 출신의 과도한 대기업 법무법인 행 자제 필요 ▷ 자율규제에만 맡기면, 플랫폼과 입점업체 갑을 관계 정리가 안 될 것 ▷ 연예인 빼가기 논란 관련 ▷ 아디다스 물량 밀어내기, 가맹계약 갱신 거절 행위 등에 대한 적극적 대응 촉구 ▷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사후 조치 미흡에 대한 사과 요구 및 HDC 그룹 회장직 유지 부적절성 지적 ☞ (정몽규 증인) 가장 큰 원인은 시공관리 잘못이며 재재하도급은 있으면 안 됨 ▷ 국회의원 모조 배지를 파는 등 알리익스프레스의 한국 브랜드 짝퉁 판매 실태 질타			

정무위원회	쿠팡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등 3개 기관	2023-10-16
○ 양정숙(무), 쿠팡이 성장하면서 쿠팡 공화국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인 것 같음.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대상 납품단가 후려치기, 정산 주기 지연 등의 문제 있음. 플랫폼을 운영하는 당사자가 PB로 직접 경쟁에 참여하면 쏠림 현상이 있을 수 있음 ○ 김종민(민), 쿠팡이 판매 대금을 너무 늦게 정산해줘 결국 입점업체는 대출을 받아야 함. 대출을 받으면 이자가 발행함. 돈이 내지 않아야 할 이자를 내면서 장사를 해야하는 것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PB 상품과 관련해서 자사 우대 이슈 등을 조사 중. 쿠팡이 (대금 정산) 시기를 단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더 긴 유통업체가 있으면 자율규제에 담아보겠음. 그게 안 되면 입법을 검토하겠음			

정무위원회

부동산PF 관련

금융감독원

2023-10-17

- 송석준(국), 은행, 카드사 등에 비해 증권사의 2분기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가장 높은 17.28%에 달함
-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부동산 PF는 엄중하게 관리해야 하는 대상으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 15%가 넘는 연체율 수준은 용납할 수 없음. 부실로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빨리 현실화시키고 숨겨진 부실이 있는지 살피겠음. 특정 금융회사들이 구조적인 리스크로 떠안을 부분이 없는지도 면밀히 살피겠음

정무위원회

공매도 관련

금융위원회

2023-10-17

- 윤주경(국), 공매도 관련 개인투자자들의 요청은 두 가지 ①차입 가능한 수량이 없으면 매도가 불가능하도록 전산화해달란 것 ②기관과 외국인의 상환 기간을 무제한 연장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 전산시스템 구축에 대해 금융위원장께선 어렵다, 내지는 안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금감원의 의견은?
-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불법 공매도 건은 시장 교란 행태가 커 근본적 차원에서 고민 필요함. (전산화) 사건임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최소 우리 거래소의 회원사인 증권사들이 해당 주문을 넣는 외국계라든지, 어떤 고객들의 대차 현황을 어느 정도 파악한 다음에 주문하는 게 적절치 않나 생각함. 그게 전산화 형태로 어떻게 구현될지는 정부 당국 내부에서 고민이 더 필요함

정무위원회

대출 완화 관련

금융위원회

2023-10-17

- 강민국(국), 금융당국이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 것이 가계부채 문제 악화로 이어졌다는 시민단체 지적 있음
-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필요한 부분에 자금공급을 축소하면 다른 사회적 문제, 경제문제가 있다는 점을 고려함. 역전세난의 어려움을 생각해보면 균형을 잘 잡아가면서 이끌어야 함. 차입자들의 어려움과 주택시장 수급문제, 가계부채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부동산 전세시장을 포함한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피겠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 상황 관련

기획재정부

2023-10-19

- 양경숙(민), (부총리가) 국가를 말아먹고 있음. 물가도 잡겠다고 했는데 지금 올라가고 있음. 경제부총리가 경제를 전망한 것이 맞는게 없음. 오죽하면 대통령 지지율이 20%대임. 국민들이 분노하고 힘든 것임. 윤 정부 1년반도 안돼 총체적 국가 부도 위기임
 - ☞ 추경호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정부를 상대로 지적은 좋은데 표현은 적정수위로 할 수 없나. 경제를 말아 먹는다고 말을 하나. 이런 표현 말고는 없나. 저도 국회의원. 상저하고라 했지만 민생이 좋다고 말한 적 없음.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좋아지고 내년에 더 좋아 진다는 것임
- 서영교(민), 추경호 부총리는 ‘추경에 관심이 없다. 경제도 어렵게 만듦. 호의호식 한다’는 말이 돌고 있음. 내년 예산에서 대통령 순방비만 올렸음. 일본에 가서 무릎 꿇고 후쿠시마 오염수를 가지고 왔음. 기재부에서 안 된다 해야 하는데 대통령하고 대통령 부인 순방가는 예산만 늘림. R&D 예산 5.2조, 지방재정 및 교육예산은 23조나 줄임. 청년 예산 1조원, 지역화폐는 전액 삭감함
 - ☞ 추경호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정상외교를 통해 외교관계를 돈독히 했고, 대통령 내외분이 해외에서 경제안보 물고를 텃음. 저도 외교현장 수행도 하지만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은 불편함. 오염수 물을 들고 왔다하는데 아니지 않은가. 한일 통화스왑이 재개됐음. 10월 물가부터는 낮아질 것임. 이스라엘 변수가 또 생겼는데 이 부분을 긴장하면서 보고 있음. 수출도 플러스 진입으로 나타날 것. 재정에서 쓸 곳은 쓰는데 방만하게 빚을 늘리는 것은 제가 책임 있는 경제부처 수장으로서 그런 재정 운영을 할수 없음. 경제성과를 책임지고 시작함. 재정운영은 떠나더라도 평가를 받을 것이며 이게 제 소신임
- 송언석(국), GDP가 1조달러 넘는 선진국 11개국 중 올해는 (한국) 성장률이 5~6등 수준밖에 안 되나 내년에는 11개국 중에서는 우리가 제일 높은 숫자를 확인했음. 성장에 대한 것도 희망이 있다고 보여짐
 - ☞ 추경호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일본이 2% 성장하고 금년에 우리나라가 1.4%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일본은 코로나19때 성장 감소 폭이 컸고 회복과정에서 소폭 오르는 것. 우리는 (2019년 대비) 7~8% 올라와 있음
 - ☞ 추경호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하반기 26조원 시설투자 자금 공급, 임시투자세액공제 활용도 제고,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 등으로 기업의 투자 확대도 적극 지원하겠음. 거시·민생경제 안정과 조속한 경기 반등을 위해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앞장서 뛰겠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 삭감 관련

기획재정부

2023-10-19

- 한병도(민), 새만금 예산 삭감과 잼버리 파행으로 상실감이 누가 컸을까, 제 생각은 180만 전북도민의 상실감이 컸을 것임. 도민들은 파행 후 아쉬워하고 미안해했음. 그러나 파행이후 더 충격은 새만금 예산을 78% 일괄 삭감한 것임. 예산으로 보복하는 정권은 보지도 듣지도 못함. 새만금 사업예산은 원상 복귀돼야 함. 기재부가 이런 결정을 자체적으로 하지 않았을 것임. 이번 새만금 예산은 반드시 복원돼야 하며 국회 예산 심의과정을 지켜볼 것임. 새만금 예산 복원 없이 예산심의는 없음

- ☞ 추경호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예산 편성에서 지역별 비교는 하지 않음
- 고영진(민), 전 세계에서 R&D 투자를 늘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30년 만에 관련 예산을 삭감했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법적 근거를 갖고 공청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만들어진 최초의 R&D 투자 법정계획이 물거품됐음
 - ☞ 추경호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우리 정부는 과학기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R&D가 대한민국 발전에 큰 기여를 미친 것으로 알고 있음. 과학기술 투자를 굉장히 늘렸는데, 그간 R&D를 방만하게 빨리 늘린 경향이 있었다고 보인다. 저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음
- 강준현(민), 전세계 모두가 R&D 투자 늘리면서 치열한 기술경쟁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에서 보기에 신기한 일임. 국가부도 위기라고 하는 IMF 때도 줄이지 않았던 R&D 예산인데 대통령 말 한마디에 삭감된 것임
- 송언석(국), 2012년부터 2017년까지 R&D 예산이 21% 정도 늘었는데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해왔다는 평가를 들었음. 그런데 문재인정부 5년간 무려 53%, 10조원이 늘었는데 R&D가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하고 경쟁력을 키웠다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가 포인트임. 그 많은 R&D 예산 중 쓰지 못하고 쌓아둔 금액만 2조 5000억원임. 제대로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생각함. 지난 정부 때 R&D 예산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엉뚱한 데 사용됐다고 하는 내용이 국무조정실 감사 결과 나타난 바가 있음. 에디슨모터스가 (엄청난) 예산을 받아 갔는데 제대로 된 성과는 없었음
 - ☞ 추경호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나뉘먹기식, 뿌리기식 이런 폐쇄적이고 분절적인 분야의 예산은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제대로 된 도전적이고 혁신적, 전략적인 R&D는 늘리자는 큰 틀에서 재조정할 것

기획재정부위원회

세수 오차 관련

기획재정부

2023-10-20

- 양경숙(민),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집단인 양 온갖 예산 재정 권력을 휘두르면서 예산 정치를 하고 오만방자하게 굴던 기획재정부 수장으로서 부끄럽지 않은가. 경제정책과 재정정책 세수 예측 전문성 부족이 함께 초래시킨 국가재정 역사상 가장 참담한 결과임
 - ☞ 추경호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오만방자하게 군 적이 한 번도 없음. 오만방자한 것은 어떤 거냐. 오만방자한 행태를 한번 말해달라
- 양경숙(민), 의논도 안 하고 (새만금 예산) 78%씩 깎은 행위를 봐라. 오만방자함을 넘어 지나치게 과도한 권력을 행사하는 것임. 가장 무시무시한 예산 재정 권력을 행사하면서 그렇게 굴고 있음
 - ☞ 추경호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기재부는 절차대로) 예산을 삭감해서 국회에 제출한 것임. 국회의원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심사하면 됨. 그것을 오만방자하다고 말하면 안 됨.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임
- 양경숙(민), 세수 오차와 관련한 특별감사를 진행해야함. 이 사태를 초래한 실무 책임자는 물론 장·차관을 직무 유기, 직무 소홀과 분식회계 등으로 고발 조치할 계획임.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요청하고 수사 의뢰까지 검토하겠음

- ☞ 추경호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세수 추계 실패가 감사할 사안은 아닌 것 같음
- 김주영(민), 작년에 법인세 인하를 논의할 때 (기업들의) 투자 증가로 내수가 좋아지고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 했는데 실제로는 세수감소가 일어남. 역대급 세수펄크가 정부지출 감소로 이어져 최악으로 몰린 서민의 삶은 더욱 더 힘들
 - ☞ 추경호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민간으로부터 세금이 덜 거둬진 것은 세율을 낮춰서가 아니라 경제 상황이 어려워서 덜 들어온 것임. 정부지출이 줄어드는 것이 걱정일텐데, 민생활력을 위한 지출은 예정대로 할 것
- 배준영(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바닥 수준인 기초단체들이 있는데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 문제제기가 있음
 - ☞ 추경호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큰 틀에서 집행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임. 일부 기초 단체 등에서는 통상적으로 보면 불용되는 부분이 꽤 있음. 연례적으로 나오는 부분으로 그걸 통한 지출효율화 등을 하면 현장에 당초 예정된 집행은 무리가 없음
- 송언석(국), 국가 채무나 재정 지출은 예산을 편성할 때 어느 정부가 책임지고 편성했느냐를 따지는 것이 책임 소재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임. 문재인 정부에서 복지 제도, 실업 급여를 늘리고 이런저런 사업을 확대하는 등 앞으로도 국가 재정에 주름을 지게 할 제도적인 개편을 했기 때문에 국가 채무가 늘어난 것임
- 박대출(국),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주식양도세는 민주당에서 3대 초부자 감세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다 여야 합의로 한 것임. 세금 문제, 경제 민생 문제는 순수한 경제 논리로 접근돼야 함. 세금으로 국민 편 가르기를 해서는 안 됨

기획재정위원회

기타 세금 관련

기획재정부

2023-10-20

- 주호영(국), 상속세 때문이 기업이 외국으로 넘어가버리는 사례가 있음. 다른 쪽으로 넘어가면 여러가지 환경상 (기업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음. 부자감세하자는 게 아니라 기업경영하는 데 무엇이 유리한지, 안 그래도 우리나라 기업들 해외로 나가는데 있는 것이라도 유지하도록 현장에서 풀어주는 노력을 해야함
 - ☞ 추경호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부의 대물림에 대한 세제개편 반감이 있음. 우리 사회적 여건도 그렇고 이 부분을 받아들이는 태세가 조금 덜 돼 있는 것 같음
- 장혜영(정), 전체적으로 유류세 감면액의 62%, 경유는 55% 등 절반이 조금 넘는 감면액만이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졌음. 나머지 감면액은 정유사들의 마진 폭을 크게 늘림. 또한 정유사들이 유가급등 시기에 원유 수입가격 상승폭 보다 더 높은 마진을 붙여 기름을 공급함으로써 정부의 유류세 인하 상당부분을 이익으로 회수함. 유류세 인하가 실제로는 소비자 혜택은 매우 제한적이고, 정유사 이익이 늘고 있다면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함
 - ☞ 추경호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우리나라는 유류에 대해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국가 가운데 하나임. 국제유가 급등기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세금을 낮춰 우선 유통가격을 줄이는 것이 국민들에게 도리임. 유류세 인하 효과의 상당부분은 소비자에게 귀착이 되고 있다고 봄. 분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국민들이 힘들어 하고 국가와 정부로부터 기대를 하는 시점에 정책적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선관위 해킹, 생성형 AI관련 등 주요 쟁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5개 기관

2023-10-16

◦ (국민의힘)

- ▷ 데이터 사업 효과 미미, 예산 낭비 개선 필요
- ▷ 선관위 해킹 우려, 투개표 시스템 문제는 사실이며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분명히 문제 인식할 필요

◦ (민주당)

- ▷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부 부처 보안점검은 처음, 국정원의 선거개입 의심. 선관위는 정반대 보도자료 냄, (협의없이) 보도자료에 KISA ‘이름 도용’, KISA의 점검결과 공개도 전례 없음, 선관위의 말처럼 사전조건 숨긴 채 국정원의 부정선거 선동이야말로 가짜뉴스이자 괴담 선동임
- ☞ (한국인터넷진흥원장) 대등한 주체로 참석한 것이 아니라 점검에 직원 3명 지원했을 뿐, 점검결과 자료 공유 못 받았었고, (국정원 발표) 충분한 협의되지 않았음, 보안취약점 해킹가능성은 있으나, 과도하게 해석해서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위험성이라고 판단하고 해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렇게 단언하기 쉽지 않음, 선관위와 국정원 모두 일리 있음
- ▷ AI 학습 데이터 및 AI 바우처 지원 관련 예산 삭감은 전 정부 사업 지우기 의도
- ▷ 생성형 AI관련 플랫폼의 책임성 문제
- ▷ 응원 클릭 수 조작 관련 단순한 해프닝을 포털 길들이기에 악용할 우려
- ▷ 윤석열 정부 출범 후 5G+전략 관련 회의 미개최, 추진계획 실행 방지에 대한 엄중한 책임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KBS 수신료, 방만경영 문제 등 주요 쟁점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2023-10-17

◦ (국민의힘)

- ▷ KBS 진미위가 KBS 망침, 양승동·정필모 증인 신청
- ▷ EBS 유시춘 이사장의 정당가입 허위경력 의혹, 증인요청 및 KBS 시사프로진행자 패널구성·출연료 자료 필요
- ☞ (위원장) 안 내면 고발할 것
- ▷ 언론노조에 장악당한 노영방송 KBS가 조작 의혹이 제기된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녹취록을 인용보도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비과학적 선동 등 편파보도 심각
- ▷ KBS의 방만경영 문제
- ▷ 수신료 분리징수는 당연함

◦ (민주당)

- ▷ KBS 사장 해임과 선임 강행 불법성 문제, KBS 이사진 증인 출석 필요

- ▷ 넷플릭스, 구글 증인 채택 필요
- ▷ 5.18 폼페 이동욱 이사 임명 KBS이사회 회의록 자료제출 필요
 - ☞ (방통위부위원장) 본인들 권한 없다
- ▷ KBS 서기석 이사장의 이사 투표권 무시, 내부절차와 규칙 어기는 등 위법한 절차에 의한 박민 사장 임명 제청은 무효임
 - ☞ (방통위부위원장) 적법한절차로 했을 것, KBS이사회의 일을 언급하는 것 적절치 않음
- ▷ KBS 박민 사장 내정자 청탁금지법 위반 및 거짓말 의혹, 권익위 조사 의뢰 필요
- ▷ 방문진 이사장 해임시켰듯이 KBS사장 선임 과정 제대로 관리 못한 서기석 이사장도 사퇴 필요
- ▷ 전임사장 해임 정지 가처분 소송 결과 앞두고 대통령의 사장 임명제청 매우 부적절
- ▷ 5.18 폼페 이동욱 보궐이사, 이전에 이사 부적격 판단 전력, 검증과정 의문, 즉시 해임 필요
 - ☞ (방통위 부위원장) 대통령실 추천은 아니고, 정당가입 경력 등 확인함
- ▷ 수신료 분리 징수로 KBS 재정 파탄 초래 우려, 보완조치 없는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 분리징수 강행은 KBS 장악 위한 정치적 목적

국방위원회

방산수출사업 관련

방위사업청

2023-10-16

- 성일종(국), 지난해 K-방산 수출이 173억불을 달성했는데 올해는 미비함. 방산이 고용을 창출해 주고 경제를 견인해 주는 것에 국민들이 든든해하니 방사청이 더 앞장서서 광범위하게 개척하고 노력하면 좋겠음
- 임병헌(국), 인도네시아와 폴란드에 지원인력이 2명 나가 있음. 지원임무하는 조직을 강화해야 할 것 같음. 인력도 늘이고 전담 해외사무소 신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기동민(민), (인니 측의 KF-21 사업 분담금 미납 문제) 근본대책을 만들어야 함
 - ☞ 엄동환 청장, 이달 초 (인니 측에) 10월 말까지 2023~25년 3년 기간 동안 (분담금 납입) 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사업 전반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음. 현물로 (분담금을) 받는 방식도 논의가 진행된 게 없음
- 한기호(국), 인도네시아 현 국방장관 프라보워 수비안토가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임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모든 판을 뒤집을 가능성이 있음. (KF-21 사업에 대한) '플랜B'를 생각해야 함
 - ☞ 엄동환 청장, 올 4분기까지 KF-21 사업에 대한 인니 정부의 공식 입장을 접수해 진행현황과 추진계획을 국회에 보고하고, 비용 및 업무분담 관련 합의서 개정도 추진하겠음

행정안전위원회

시민단체(희망먹거리네트워크) 먹거리공급 관여

서울시청

2023-10-16

- 조은희(국), 박원순 시장 시절, 서울시와 특정 시민단체가 한 몸통인 것처럼 정책 설계를 하고, 그 시민단체 핵심 인물이 서울시 급식 실무 과장으로 채용되고 대표는 급식 TF 위원장 자문관을 맡아 끼리끼리 담합하였음. 이들이 만든 6개 공공급식센터에서 후쿠시마 원전수 반대운동에 참여한 단체와 협력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을 보였음. 이 문제를 어떻게 개선하고 있는지?

☞ 서울시장, 의원님 지적대로 시민단체가 수탁기관에 참여하고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발표한 바 있음. 내년 1월부터는 친환경유통센터로 통합 운영할 계획임. 본 건 관련 감사와 수사 과정에서 불법요소 발견시 처벌할 계획임

행정안전위원회

기후동행카드 관련

서울시청

2023-10-16

- 이해식(민), 국토부는 지방정부와 협의없이 k-pass사업 추진을 하루 전 통보하고 발표. 서울시는 경기 인천과 충분한 협의없이 기후동행카드를 내놓음. 서울시와 국토부가 주도권 싸움하는 것 아닌가?

☞ 서울시장, ‘경기·인천과 완전한 협의 후 사업시행은 현실적으로 어려웠음. 내년 상반기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경기·인천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음. 국토부와 주도권 다툼 생각은 전혀 없음’

문화체육
관광위원회

국내 OTT 산업 관련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15개 기관

2023-10-17

- 김승수(국), 티빙, 웨이브, 왓챠 등 국내 OTT 매출액을 다 합쳐도 넷플릭스 하나를 못 이기는 상황임. 특정 업체 독점이 심화되면 향후 플랫폼사의 갑질이 발생할 수 있고 국내 OTT 업계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지원책이 필요한 상태임

☞ 허승 왓챠 이사, 콘텐츠 제작 비용이 상승했고 높은 망 비용과 인앱결제 수수료 비용을 가지고 막대한 자본력을 가지는 글로벌 OTT와 경쟁하고 있음. 기울어진 운동장에 싸우는 상황 임. OTT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수준도 매우 한정적임

문화체육
관광위원회

게임물 관리 관련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15개 기관

2023-10-17

- 김윤덕(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운영하는 게임물 전문지도사가 특정 지역에 편중돼 선발된 것으로 나타남. 게임 관련 교육 역시 일부 지역은 배제된 채 진행되고 있음. 게임위에서는 사후등급분류 모니터링 요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그동안 용역회사에 속해서 모니터링을 해왔음. 이용자 눈높이에 맞는 전문성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해야 함
- 류호정(정),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신작의 존재가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심사를 통해 전 세계 최초 공개가 되고 있음. 심사신청 할 때 정보공개 시기를 늦춰 달라고 할 수 있는데 해외 업체는 이를 몰라 비밀리에 준비하던 작품이 공개되는 사태를 맞고 있음
 - ☞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각국 등급분류 제도가 달라서 월드와이드로 발매 일정을 맞추기 위해 그러한 일이 발생했다고 보고있음. 블라인드를 시행하고 이를 안내하고 있으나 영어 홍보 등을 통해서 준비해보겠음

문화체육
관광위원회

저작권 관련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15개 기관

2023-10-17

- 전재수(민), 알라딘 등에서 전자책 대량 해킹 사건이 발생했음. 보안 취약점을 악용해 각 전자책에 걸려 있는 DRM이라는 암호장치를 해제할 수 있는 키를 탈취한 것인데 자칫 전자책 수백만 곳이 유출될 수 있었던 심각한 상황임. 정부 차원의 보안 환경 개선과 규격화된 보안 수준에 대한 체계적인 제도 마련해야 함
 - ☞ 임성한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장, 문체부가 DRM 연구용역을 했는데 널리 활용되지 못한 부분들은 아쉬움. 충분한 안내를 하겠음. 전자책을 보유한 공공도서관 전체를 대상으로 보안 점검을 실시하겠음

문화체육
관광위원회

GKL 횡령 및 부실운영 관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14개 기관

2023-10-19

- 유정주(민), 오사카 사무소장이 2억5천만엔(약 2억3천만원)을 횡령했는데, 그해 7월 팀원으로 보직이 변경됐고 스스로 퇴직했음. GKL은 횡령한 사람을 해고하지 않고 팀원으로 내리고 남겨두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가. 심지어 오사카 사무소장의 횡령 사건이 제대로 보고가 안 돼 징계 면직 처리를 못하고 퇴직금까지 전액 지급되었음
 - ☞ 김영산 그랜드코리아레저 대표이사, 2019년 당시 직원이 좀 문제가 있어서 퇴직하기 전에 그냥 일반 팀원으로 내렸다고는 들었다"며 "하반기 정기인사였고 인사권자의 종합적 판단을 통한 것임

- 이용호(국), GKL 오사카 크레딧 에이전트에 돈을 맡겨야 하는데 고객이 오사카 사무소에 돈을 맡겼고 그 돈을 사무소장이 횡령함. 소장도 원래는 3년씩 근무하는데 (문제의 소장은) 5년 5개월을 근무함. 서로 덮어주고 인사 조치하고, 감독할 위치에 발령하고 그 조직 전체가 지금 썩어 있는 거 아닌가?
- 배현진(국), GKL은 100억 원의 기관 재정을 이른바 항공기 펀드라는 데 투자를 했는데 결과가 전액 손실임. 이 펀드는 폐쇄형 펀드이고 투자자 보호도 안 되는 고위험 상품임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투자임
☞ 김영산 그랜드코리아레저 대표이사, 안정적인 자금에 계속 투자하고 있다가 이사회나 경영평가 등등 해서 좀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하라고 했던 것임
- 임오경(민), 100억원 손실이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뚫은 것이 터진 것임. GKL 자산운용 규정에 따르면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무시한 사태임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관련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10개 기관

2023-10-20

- 최춘식(국), 수협에서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대처를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음. 수협에서 사내방송도 하고 현수막도 676개나 게시했는데, 홍보 방법이 신문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음
- 안병길(국), 수협중앙회장님이 어민들을 살리기 위해 오염수를 먼저 처리수라 명명한 점에서 소신 있게 행동했다고 생각함
- 주철현(민), 우리나라 어민들은 100% 방류를 반대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 수협이 한 활동이 무엇인가? 일본에서 방류를 결정하고 방류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있었는데, 어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반영해 활동했어야 함
☞ 노동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어업인들을 위해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는 데) 전력을 다했음. 방류를 막는 것은 어업인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님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전 관련

한국전력공사 등
16개 기관

2023-10-19

- 김성원(국), 1961년 한전 설립 이래 정치인 출신 사장이 처음인데 낙하산 인사라거나 비전문가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한전에 가장 필요한 것이 정치력임. CEO로서의 정치력을 가지고 한전의 위기를 극복해야함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 한전 경영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자구책, 요금 정상화, 구조적인 조정 등 세 가지 축이 있고 선 요금 인상 후 구조조정인지는 의미가 없다고 봄. 같이 이뤄져야 하고 사장으로서 한전에서 정치력을 발휘해서 한전 정상화를 하는 의미로 창사 이래 처음으로 정치인 출신 사장이 간 것 아닌가 생각함

- 김성원(국), 한전 정상화를 위해 한전 사장으로서 각오가 무엇인지?
 -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 1차적으로 전기요금 정상화가 이뤄져야 함. 에너지를 95% 수입하는 나라에서 원가보다 싸게 전기를 공급하게 하는 이 시스템 가지고는 절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함. 전기요금에만 의존하는 한전이 돼서도 안 된다고 생각함. 지금 에너지 신산업 신기술 쪽에 투자 규모가 2050년이 되면 누적 8경 원인데 이 어마어마한 시장을 절대 놓쳐선 안되며 한전을 중심으로 전 우리 에너지 생태계가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함
- 김한정(민), 한전은 윤석열 정부 들어 부채가 크게 늘었다. 해결하지 못하면 에너지 산업 기반이 흔들리고 국민 고통이 커질 수밖에 없음. 산업부 장관이 선 구조조정 후 요금조정을 해야한다고 한 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 한전의 재무위기는 여러 요인이 있음. 가장 큰 요인은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환율이 상승했지만 제 때 요금을 인상하지 않은 것임
- 김한정(민), 한전 사장은 구조조정을 알아서 해야 함. "선 구조조정, 후 요금조정이 아니라 선 요금 정상화, 후 구조조정을 말해야 하는 것 아닌지. 그래서 지금 의구심이 듬. 한전 사장이 한전을 살리러 온 게 아니라 정치적 방탄 사장으로 온 것 아닌지. 한전을 살리러 온 것인지, 총선을 살리러 온 것인지?
 -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 정부 당국으로서 요금 인상에 대해 왜 생각하지 않겠음. 요금 인상 부담이 국민에게 돌아가 수용성을 높이려면 한전도 일정 정도의 자구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임
- 양향자(한), 첨단산업은 스피드가 생명이고 경쟁국에선 정부가 직접 나서 이에 필요한 송변전 설비를 공급 중인데 우리는 한전이 재정건전화 대책 차원에서 송변전망 구축을 늦추고 있음
 -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 자원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의 협조와 주민 수용성 확보가 너무 힘들어진 탓에 한전 혼자서 이 업무를 감당하기엔 너무 벅찬 상황임. 이젠 송변전망 구축을 국책 사업으로 생각하고 중앙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함. 현재 정부와 국가기간전력망 특별법을 준비하는 중이며 곧 발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이재정(민), (한전)인력 감축 등 추가 자구책과 관련 노조와의 협의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 노조와 몇 차례 만났고 아직 100% 다 털고 이야기할 사이는 아니지만 노조위원장의 진정성을 느끼고 있음. 노조위원장은 노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국민질책과 비판을 수용하면서 내놓을 것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사태의 책임이 직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함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온누리상품권 관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10개 기관

2023-10-20

- 김정호(민), 온누리상품권은 올 8월 기준 2897억 원, 지역화폐는 올 6월 기준 3522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았으나 사용 실적은 온누리상품권 8000억원, 지역화폐 11조 6500억 원으로 약 14배 차이를 보이고 있음. 온누리상품권의 목표 대비 실적은 20%에 불과함.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의 실적 차이 이유 등을 산자위에서 면으로 보고 부탁

- 양금희(국),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대학가 등 골목상권에선 이를 사용하지 못해 불만이 나오고 있음. 젊은층의 온누리상품권 유입차원에서도 골목 상권을 사용처로 적용시켜야 함
- ☞ 박성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골목형 상점가 지정 권한이 지자체에 있어 대학가 등 인근 골목상권의 지정을 지속 권장하고 있음. 현재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에서 사용될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는데 상점가에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상점가에서 사용할 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만들어 주셨으면 함

보건복지위원회

건보 보장성 강화, 건보재정 및 관련
자료제출 문제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3-10-18

- 강선우(민), MRI 및 초음파 급여화 기준은 전문적 의료기준에 적합한 것이었음. 무분별한 과소비 의료 관련 정확한 데이터 분석하고 밝힐 것. 문재인 케어 때문에 재정파탄 났다고 주장하면서 희귀질환 예산삭감 부분 질타하며 뇌졸중 MRI등 문재인 케어 관련 자료제출을 촉구하면서 "개념을 잘못 적용한 자료를 의원실에 제출했다. 개념이 잘못된 자료를 바탕으로 국정감사를 하라는 거냐"고 추궁하는 과정에서 '자료강요' 발언한 공단 이사장 답변에 대해 사과 요구하며 국감 파행
- ☞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자료를 굉장히 급하게 요청해 자료를 보완할 것을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그 상태로 금요일 밤 늦게 나갈 수밖에 없었음. 자료 제출을 상당히 강요를 받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음
- 강기윤(국), 고성을 질러서 할 얘기가 아니라 정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무슨 잘못을 따지기도 다도 지난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개선해야 된단지 하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음
- 김원이(민), 문재인케어 건보재정 논란이 많음. 투자 대비 효과성 등 정확한 분석 필요. 강선우 의원이 요청한 뇌·뇌혈관 MRI 급여확대에 따른 검토 자료 제출 관련 자료 제출을 하겠다는 직원에게 해석상 문제가 많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사장의 발언이 강요고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것임
- 김민석(민), 건보 보장율 관련 재정과 보장 중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건보재정과 관련 실제 생활에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함. 강선우 의원 보고서 관련 왜 제출하지 않았을까? 문재인 케어나 K방역이 문제였다면 포플리즘 관련 입증은 내놔야 함. 직무유기임
- 이종성(국), 제 질의는 특정 의원을 반박하는 것이 아님. 증인에게 질의를 통해 국민에게 정확한 팩트를 알려주는 의미에서 하는 것임. 건보 적립금 고갈 언제로 예상하나? 재정 절감을 해야 하는 것인가? 보장율을 높여야 하는 것인가? 의료비 절감을 저출산 상황에서 의료비 부담 완화에만 집중해야하는 것인가?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가 중요함. 중증환자, 응급환자 필수 의료에 쓸것인가는 철학적 문제로 접근해야 함. 포플리즘의 기준이 있는가? 각자가 판단하는 것임. MRI 초음파 건보 적용 확대에 따른 수혜자 수와 이에 따른 목표 급여비 지출달성도 세부 지표에 포함되는 것임. 문케어 관련 항목에 대한 과다지출 관리는 성과지표에 포함되지도 않았었음

- ☞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동의함. 건보적립금 고갈은 29년으로 예상함
- 전해숙(민), 뇌 MRI 급여 확대 전후 허혈성 뇌졸중 조기 발견 환자에 변화가 있었음. 국민들 건강을 챙기고 이로운 것임. 의사들이 오남용하는 것이 문제임. 보장성 안에만 들어오면 포플리즘이 아님. 전정부의 정책이라고 무조건 깎아내리는 것은 아니라고 봄
 - ☞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재정만 문제 없다면 필요함
- 남인순(민), 문재인 케어 공방 관련 보장성 강화는 맞는 이야기인가? 문재인케어로 건보재정 파탄인가? 앞으로의 방향이 문제임. 체계적 모니터링으로 뇌 MRI 급여기준 개선하여야 함. 건강보험 적용 확대가 재정낭비는 아님. 비급여 관리 확대 및 건보 정부지원금 교부 주장
 - ☞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아직까지는 괜찮음. 재정에 맞게 꾸준히 보장성이 확대되어야 함
- 서영석(민), 윤석열 정부만 보장성 강화가 포플리즘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음. 이사장의 정확한 의견은 무엇인가?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착수함,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까지 축소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음. 관련 보완 대책 마련 요구
 - ☞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보장성 강화는 당연히 해야하는것임. 피부양자 개선은 연구용역 후 반영하겠음
- 강기윤(국), 심평원의 사보험 위탁 관리 문제 지적. 건보재정 수요가 폭발할 것임. 지출을 좀 줄이는 방법으로 건강생활을 영위하는 프로그램 필요. 체육활동 의료비 절감 효과 2배 이상 남. 선제적으로 프로그램 등 고민 해주길 바람. 전국 16개 시도 중 한곳만이라도 시범사업 제안. 건보료를 걷는데 집중하는 것보다 지출을 줄이는 방법으로 전환할 필요 있음. 지역가입자 건보료 자동차 부과 없애야 함. 생계형임
 - ☞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건강증진 사업하고 있음. 지자체 사업으로 알고 있음. 법령상으로 검토해보겠음. 자동차 부과하지 않았을 때 건보 부담 330억 정도임. 소득적축을 제대로 안하고 있음. 형평성 등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음
- 최영희(국), 상호주의에 입각한 중국인 건보 제도 개선 필요함. 중국인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문제 지적 및 외국인 건보 누적 상위 10명 현황을 보면 거의 중국인임. 건보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인 건보 무임승차 반드시 해결되어야 함
 - ☞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법안 개정과 함께 준비하겠음
- 김미애(국), 건강보험 보장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나? 다른나라에 비해 보험료가 현저히 낮기 때문에 단순비교하면 안됨. 급여화가 시작한 18년부터 MRI촬영건수 증가함. 뇌 MRI 재정목표 대비 실지출액을 보면 기준개선을 실시했으나 목표치 대비 실지출액 줄어들지 않았음. 기준개선에 따른 현장 혼란 예방 조치 필요함.
- 서정숙(국), 최근 5년간 흡연으로 인한 건보료 급여 지출 13조 8,164억. 진료비 및 급여비 급증함.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음. 공단이 담배 소송 및 흡연에 따른 질병군에 대해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리는 예방정책이 적극 필요함. 개인의 건강과 건보재정성을 확보하기 바람
 - ☞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담뱃값을 올리면 흡연율을 줄일 수 있는 최고의 대책일것이라 생각함

환경노동위원회

기상청 긴급재난 문자 오류 및 관측장비
악성코드 관련기상청 등
17개 기관

2023-10-16

- 김영진(민), 울여름 처음으로 ‘극한호우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됐을 때 기술적 오류로 엉뚱한 동네에 예보가 갔던 점과 기상청의 극한 호우 기준이 서울시 기준과 달라 국민사이에 혼란을 줄 수 있음
 - ☞ 유희동 기상청장, “극한호우 재난문자와 관련한 기술적 오류는 즉각 해결했고, 기상청과 서울시 기준이 다른 부분은 제일 아쉬움. 동일한 기준점은 방재의 기본으로 서울시와 협의해 조정하겠음”
- 임이자(국), 중국산 연진바람관측 기상장비 5대에서 악성코드가 발견됐으며, 보안이 뚫렸다고 볼 수 있음. 기상청 전산망을 통해서 재유포될 경우 상당한 혼란을 초래 할 수 있음
 - ☞ 유희동 기상청장, “기상장비 내 소프트웨어는 임베디드(내장형) 시스템인 경우가 많아 (악성코드를) 걸러 내기 굉장히 어려움. 앞으로는 제안서 제출 단계에서부터 문제 삼겠음”
- 지성호(국), 악성코드를 심은 주체가 북한 정찰총국인지, 중국 공안인지, 그 밖의 해킹 조직인지 조사한게 있는가? 중국 정부에 (악성코드 발견에 대한) 유감·항의 표현을 한 게 있는가?
 - ☞ 유희동 기상청장 “송구함. 보안 주무부처인 국가정보원과 함께 장비 내부 구성품에 대한 매뉴얼까지 철저히 검사하겠음”

국토교통위원회

아파트 철근누락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4개 기관

2023-10-16

- 강대식(국), 메이저급 건설회사가 대국민 사과할 때와 달리 이제와서 법적 검토니 이런 무책임한 말을 내뱉고 있는 것에 대해 통탄하지 않을 수 없음. 현실적인 대안 제시가 가능토록 LH가 적극 협의하고 국토부가 적극 중재해야 함
- 서일준(국), LH 무량판 지하 주차장을 넘어서 최근에 벽식구조 아파트 현장에서 외벽 철근 30% 누락이 드러남. 이슈가 터지면 정리가 되는 것이 아닌 숨어있던 적폐들이 확인되는 모양
 - ☞ 이한준 LH사장, 최근 부실시공 문제는 2021년 주택 로드맵으로 인해서 주택 공급이 급증하다보니 LH에서 제대로 관리 못한 결과임. 앞으로 발주자로서 역량을 강화하러 노력하겠음
- 유경준(국), 직원 땅 투기 사태 이후 LH가 3년 연속 경영평가에서 D 등급을 받아 성과급을 못 받는 것을 포상으로 채우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철근 누락 사건을 방조한 LH가 자화자찬을 멈추고 국민께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함
 - ☞ 이한준 LH사장, LH는 공사발전에 기여한 직원과 부서에 대한 포상제도를 운영 중. 이번 창립기념 포상은 각 부서별로 추천된 모범직원을 선정하여 시행했으며, 건설안전관리처 소속 직원은 토목분야 사업관리 담당 직원으로서 이번 철근누락 사건과는 무관함

국토교통위원회

철도 민영화 관련

한국철도공사 등 8개 기관

2023-10-17

◦ 허영(민), 지난 1월 1조원 규모 차량 제작 및 정비사업 입찰 추진해서 4월에 현대로템을 낙찰자로 선정했고, 8월에 입찰 비리 의혹으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압수수색 받고 수사 진행중. 추정 가격을 보면 차량 유지보수 서비스가 4750억 원인데 이것을 현대로템에 맡기겠다는 것은 민영화하겠다는 것 아닌가?

☞ 이종국 (주)에스알 대표이사, 민영화와는 관계없음. 위탁사업은 여러 업체에 맡길 수 있는 것. 장관님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민영화 계획이 없다고 누차 말씀했음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발간 등)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10/23(월) 12:00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 무엇을 혁신해야 하나?	윤상현 의원실, 민주화운동동지회	의원회관 2세미나실
	10/23(월) 14:00	유·초·중·고등학교 교육 예산 축소 대응 국회 정책토론회 - 지방교육재정 위기, 문제와 해결방안은?	김철민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소회의실
	10/23(월) 14:00	우주항공청 조기 개청 토론회	강기윤·강민국· 김영선 의원실 등	의원회관 대회의실
	10/23(월) 14:00	제대로 된 우주정책전담기관 설립을 위한 토론회	조승래 의원실	의원회관 2소회의실
	10/24(화) 10:00	배달플랫폼 라이더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보호방 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진성준·강성희· 한준호 의원실	의원회관 9간담회실
	10/24(화) 13:30	주택도시보증금의 지방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김두관 의원실	의원회관 3세미나실
	10/24(화) 14:00	수확기 쌀값 20만원 유지가능한가?	홍문표 의원실	의원회관 1세미나실
	10/25(수) 10:00	청년 공천 30% 혁신 공천 세대공천 민주당 청년 의무공천 실행 방안 모색 토론회	전용기 의원실 등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10/26(목) 17:30	국가발전정책연구원 제84차 정책세미나 - 매킨스컴퍼니 조응래 회장 역발상을 다시 역발상하라	이명수 의원실	의원회관 8간담회실
자료집 등	10/23(월)	「최근 현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 발간	국회사무처	
	10/24(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33호(2023-21호) 발간 - 미국의 ‘자립준비청년’ 지원 입법례	국회도서관	
	10/25(수)	「금주의 서평」 제650호 발간 - 도서명 : 나는 죽음을 돕는 의사입니다 - 저 자 : 스테파니 그린		
	10/25(수)	「Data & Law」 2023-10호 발간 - 데이터로 보는 플랫폼 노동		
	10/26(목)	「현안, 외국에선」 제69호(2023-19호) 발간 - 중러북 협력과 한반도 외교안보		
	10/23(월)	「NABO 경제동향」 제39호(10월호) 발간	국회예산정책처	

	10/23(월)	「NABO FOCUS」 제64호 발간 - 외국인직접투자 활성화 방안		
	10/24(화) 09:00	「탄소중립 국제포럼」 개최 - 유럽의 환경규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국회입법조사처	의원회관 2소회의실
	10/23(월)	「Futures Brief」 제23-17호 발간 - 미래사회 변화를 이끄는 11대 이슈: 개인과 공동체, 그리고 사회의 미래	국회미래연구원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1] 지난 호 뉴스레터(제205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자료집 등	10/18(수)	「금주의 서평」 제649호 발간 - 도서명 : 경성 백화점 상품 박물지 - 저 자 : 최지혜	국회도서관	
	10/18(수)	「World & Law」 2023-19호 발간 - 치명적인 기술유출, 어떻게 방지할까?		
	10/16(월)	「NABO FOCUS」 발간 - 5G 28GHz 주파수 할당 취소 이슈 및 문제점 발간	국회예산정책처	
	10/17(화) 09:30	「제12차 의회조사기구 국제세미나」 개최	국회입법조사처	의원회관 1소회의실
	10/18(수)	미국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		
	10/19(목)	「NARS 현안분석」 제301호 발간 - 가석방 없는 종신형(終身刑) 제도 도입의 전제		
	10/19(목)	「NARS 현장실태조사」 제7호 발간 - 손말이음센터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10/16(월)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80호 발간 - 지속 가능 주거체제를 위한 주택 부문 정책 의제	국회미래연구원	
	10/16(월)	「Futures Brief」 제23-16호 발간 -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영향과 중장기 대응전략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10.16~10.22)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분야	내용
10/17(화)	IT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안
10/19(목)	ESG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이후 미국의 공급망 재편 및 중국 견제를 위한 산업-통상정책: 보조금 VS. 관세
10/19(목)	통상관세	2023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의 내용과 시사점
10/19(목)	소송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생활/공업용수의 단가를 산정함에 있어 기획재정부 훈령인 공공요금 산정기준보다 당사자 간의 계약이 우선함을 인정받은 의미 있는 판결

입법전략자문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백대용 | 변호사

[프로필보기](#)



장대섭 | 고문

[프로필보기](#)



김광재 | 변호사

[프로필보기](#)



김성범 | 변호사

[프로필보기](#)



안현정 | 변호사

[프로필보기](#)



방세희 | 변호사

[프로필보기](#)



성재열 | 변호사

[프로필보기](#)



백운일 | 전문위원

[이메일주소](#)

SHIN&KIM

법무법인(유) 세종